

# JOC 임계 사고로부터의 재출발

村上 達也

日本 東海村 村長

이 글은 지난 4월 28일 일본 원자력산업회의의 제33회 연차 대회 행사의 하나인 「東海村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현지 촌장의 발표 내용이다

이 심포지엄은 작년 9월 30일 발생한 JOC 임계 사고 현장에서 현지 주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려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본 내용은 원자력계로서는 채찍과 충고였으나 발표자의 뜻을 충실히 전하기 위하여 발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으므로 일부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편집자)

**일** 본 후쿠오카(福岡)대학의 오오시마 히도시(大嶋 仁) 교수는 그의 저서 「후구자와 유기찌(福泥論吉)의 권고」에서 유기찌는 실학(實學)의 장려자, 실리주의자, 공리주의자라고 불려지

고 있는 바, 유기찌가 말하는 실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기찌는 ‘일본 사회과학의 파이어니어, 사회과학의 길을 개척한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위험한 실학’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찌하여 실학, 즉 사회과학이 위험한가. 그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맞는 위험으로서 공동체 사회는 신화 환상(神話幻想)으로 떠받쳐 지탱해 나가는 사회로 사회과학은 그 신화 환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신화 환상을 그대로 믿는 것이 곤란하게 되며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실학, 즉 사회과학은 위험한 것이라고 오오시마 교수는 말하고 있다.

### 원자력 '공동체' 의식으로부터의 탈출

JOC 임계 사고 후 정부나 원자력 관계 기관에 대한 본인의 발언이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켜 여러 방면에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다.

사고의 와중에서는 물론, 사고 후의 처리에 있어서도 본인은 지역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생각하고 발언해 왔다.

본인의 양심을 걸고 당연한 것을 발언해온 것 뿐이었지만, 그것이 ‘원자력의 마을 도카이무라의 촌장은 원자력 공동체의 한사람이다’ 라는 지금까지의 논리에서 본다면 ‘공동체를 대상화·객체시키는 행위’로서 공동체의 한사람으로서 벗어난 발언이 되었는지.

금번의 임계 사고로서 원자력의 안전 신화는 무참히 붕괴되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고조사위원회도 “이른바 원자력의 ‘안전 신화’ 나 관념적인 ‘절대 안정’ 이라는 표어는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신화’ 에 속박되어 있는 원자력 공동체의 친구들은 본

인의 발언에 따라오지 못하는 양 그 사고는 사라졌는 한 민간 기업이 일으킨 사고로서 원자력 사업 전체의 문제는 아니며, 그것도 겨우 우라늄 1mg이 타버린 소규모 사고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나 사고에 대한 인식이라면 일본의 원자력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며 원자력 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는 것이다.

오오시마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화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조금도 의문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전부를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생각한다.”

원자력계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이번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고를 계기로 크게 증폭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여론과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점이 앞으로의 일을 결정짓게 된다.

여기에는 공동체 사람들이 폐쇄적인 공동체 사회로부터 의식적으로 밖으로 나와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자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역풍’이 불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몬주」 사고가 있었던 1995년부터 ‘역풍’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론에 대항

하는 것처럼 ‘안전 신화’도 스스로 증식(增殖)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원자력 사고에 대한 법 정비·조직 정비도 지연되어 이번 사고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청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현(懸)의 「원자력방재계획」이 있지만 원자력 사고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로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가상 사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나 대응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바,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재 계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반원자력이나 탈원자력의 주장은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추진파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인가.

정의는 우리에게 있으므로 반론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자세로 자기들의 생각을 집단·공동체의 힘으로 밀어 부친 일은 없었는가.

일본의 원자력 이용은 탄생 시점부터 이데올로기 논쟁에 휩싸인 적이 있었지만, 주민들로서는 이번의 사고를 계기로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찬·반 쌍방 모두가 자신의 이데올로기 체질과 자세를 자각해서 반론에도 겸허한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번째 중대 사고가  
왜 도카이무라에서 일어났나**

도카이무라는 1956년 일본원자력연구소를 유치한 이래 원자력과 더불어 약 45년간을 걸어왔으며 그 때문에 ‘원자력 발상(發祥)의 땅’이라 불려지면서 일본의 원자력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이 ‘원자력의 마을’에서 불과 2년반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속 일본의 원자력 사고 사상 최악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점잖지 못한 표현을 쓴다면, “국가 정책에 따라 이것 저것 무엇이든 수용한 ‘원자력의 마을’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원자력의 선진지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싶다.

본인이 촌장이 되어서 원자력 관계자로부터 여러 번 듣고 귀담아온 말이 있다. “도카이무라는 기분 좋은 땅이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이다.

확실히 도카이무라에는 과거 이렇다할 반대 운동도 없었고 게다가 1997년 3월의 동력로핵연료사업단의 화재 폭발 사고까지는 원자력 사고도 없이 40여년이 지나왔으므로 원자력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해 왔다.

이와 같은 서로간의 긴장감 결여

와 달콤한 관계가 사고의 배경에 있었던 게 아닌지 반성하고 있다.

도카이무라는 일본 전국의 町村會같은 데서 흔히 과소지(過疎地)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은 과소지와 결부시켜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카이무라는 36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3만4천여명이 살고 있는 동네이며, 14개의 원자력 관계 사업소가 있다.

JOC 같은 연료 가공 회사가 3개사, 원전 2기(그 중 1기는 페로), 재처리 공장, 그리고 원자력연구소의 연구로 및 기타 시설 등이 있어, 도카이무라 내에서도 국책 사업인 '핵연료 사이클'이 완성된다.

이와 같은 지역의 촌장의 발언은 국가의 원자력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이므로 신중한 발언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긍해왔다.

그렇지만 임계 사고 후에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말해야 할 것은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원자력의 마을' 도카이무라로서, 촌장이 원자력에 관해서 자유롭게 말하지 않으면 촌의 정책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장래나 운명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원자력 발전지의 현실

역사를 살표보면 도카이무라는 원자력의 덕분으로 발전해왔으며, 또한 원자력에 공헌도 해왔다. 동연(동연)의 재처리 공장은 이바라기현 의회, 하다찌시 의회, 현어련(懸漁連) 등에서 반대 결의를 했지만 도카이무라 의회가 최후까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되었으며, 1977년에는 재처리 공장 운전에 대해서 미국 카터 대통령의 잠정 중지 요청으로 암초에 부딪혔을 때 당시의 촌장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이것이 주요하여 운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원자력은 도카이무라의 발전의 기반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의 작은 촌'이 '국가 정책'을 등에 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떻게 평가 받고 있는 것일까.

'국가 정책'을 등에 지고 왔는데, 그 결과가 촌(村)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손상을 준 것이 이번의 사고인 것이다.

「동연」의 사고 후 국가와 원자력계는 안전 확보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카이무라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방사

성 폐기물이 축적되고 있다.

저준위 폐기물은 전국의 1/3, 드럼 관 약 33만개,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은 불안정한 용액 그대로 450~480 입방미터나 고화체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놓아두고 있다.

원자력을 수용한 주민을 중요하게 배려했다면 이러한 일도, 사고도 없지 않았을까.

1956년 당시의 촌장은 "원자력의 안전은 과학자의 영특한 지식과 양식에 맡기자"라고 하며 원자력을 유치했고, 그래서 '국가 정책'을 등에 지고 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가나 원자력계에서 배려가 없었다고 말한다면 반론할 수 있을 것인가.

### 지방의 논리와 주장

원자력 발전이 전기 에너지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소자원국 일본에 있어서 원자력은 에너지 확보, 안전 보장에 불가결하며, COP3에 의한 이산화탄소 삭감에도 원자력 발전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입지에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론·일반론으로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에 지방의 관점이나 지방의 감정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 것인가.

고도 경제 성장하에서 지방은 과

소화(過疎化)에 위협을 받아왔다. 과소화를 막는 지역 진흥을 위해서 잠재적인 위협성을 의식하면서도 또한 주민 사이의 알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을 받아들여왔다.

원자력 발전 없이 지역 진흥이 된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칠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데 본심이 있지 않았을까.

지난 2월 25일 언론계의 한 논설 위원이 도카이무라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원전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도카이무라는 전원교부금(電源交付金)으로 윤택해진 것은 아닌가?”

이는 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더구나 원자력 사고를 당한 지방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심정한 도시인의 질문이라고 즉석에서 느낀 본인은 “도쿄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임해 부도심의 토지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 그곳에 원자력 시설을 유치하면 어떤가?” 하고 답변을 했다.

전국을 하나의 단위가 아니고, 지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분해서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는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 같은 자연 에너지로서 임시 변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것으로 충분치 못한 도쿄나 요코하마·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국가 정책’이란 무엇인가. 원자력 이용, 원자력 발전은 ‘국가 정책’이라고 하지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것인가.

전국원자력협의회는 원자력 추진에는 ‘국민적 합의 형성’이라고 말하면서 입지측, 즉 지방에서의 의견 진술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지금은 지방도 돈이 필요없으므로 중앙에서도 책임을 분담하라, 적어도 지방의 마음을 알아라라고 말해주고 있다.

지방 분권 시대가 되어 지방 자치권이 무성하지만, 거기서 뽑혀 올라오는 선구적 자치체의 대부분이 홋카이도(北海道)나 도후쿠(東北), 규슈(九州) 지방의 중산간지(中山間地)의 작은 市·町·村이다.

고도 성장 경제 노선 가운데서 지방은 쇠퇴했고, 지방에 남아 있기 때문에 쇠퇴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전후 일본의 경제 발전주의 일변도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를 지방의 자연 가운데서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때문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에서 돈을 필요로 해서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결과,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을 위한 처분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많지만 당연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도시의 쓰레기 폐기장이 되어가는 것을 지방의 프라이드가 허락할 수 있을 것인가. 폐기물과 같이 취급된다면 어떻게 자존심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돈을 내졌으니 원전을 수용하라 해도 듣지 않고, 무리한 힘이 효과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원전 입지는 JOC 사고 후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방의 논리나 주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들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에너지 문제의 여러 시점**

작년 말 「자연에너지촉진의원연맹」이 아이찌 가스오 중의원 의원을 회장으로 국내에 창설되어 「자연에너지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의 촌’ 촌장으로서는 부정적이지만 그 동향에 주목하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의 장래를 위하여 복안적(複眼的) 어프로치의 탄생을 환영하고 싶다. 원자력 추진파라 하더라도 신에너지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자력 추진에 있어서 복수 안목의 반대, 그리고 단안적(單眼的)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논리밖에 보지 못하는 것으로, 소자원국 운운도, COP3 운운도, 더욱이 2010년까지 20기의 원

전 신규 건설이라는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한 안목에 기인한다.

원자력 선진국인 일본이라면 세계적 관점에 입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미 세계에는 430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원자력의 안전성도 지구 규모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기술 수준이 낮은 지역까지 원자력 발전을 증가시켜도 괜찮은가.

그리고 원자력 사고의 대부분이 인적 실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원자로 노형이 괜찮은가.

안전 규제 체제도 타국가를 리드할 수 있다고 말할만큼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의 빈약한 안전 규제 체제로서는 타국가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는 법 제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도카이무라의 실패가 반영될만큼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대로 원전에 의존해 간다면 지구 규모의 빛의 유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자연 에너지를 성실히 그리고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지구 규모의 여러 시점에서 원자력을 추



JOC 임계 사고 후 방독 마스크와 특수 방재복을 입은 일본 이바라키현 경찰관들이 도카이무라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

고도 성장 경제의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사회는 폐쇄(閉塞) 상황에 빠져있고 아직 그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계도 역풍(逆風)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JOC의 임계 사고는 지금까지의 원자력 행정의 문제를 단번에 표면화시켰을 뿐 아니라 폐쇄 상황하에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도카이무라의 촌장으로서 사고 후의 건강 조사 문제, 손해 배상 문제의 해결, 그리고 방재 대책의 강화책을 강구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

는 마을로서, 더 나아가 장기적인 문제로서 설왕설래되고 있는 과제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문제들을 원자력 관계의 대사(大事)로서 나아가서는 '국가 정책'으로서 전부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영지를 모아 자주 독립의 정신과 사상에 입각하여 추진함으로써 21세기에 상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과제를 이뤄나갈 생각이다.

따라서 원자력 산업계에 바라는 것은 JOC의 임계 사고를 축소화하지 말고 여기서 나타난 전반적인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사회과학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교환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